

14장 - 포스트식민, 탈식민, 반식민의 지리

최경현 선생님은 이번 토론문에서 한국이 탈식민과 신식민의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고하고, 진정한 탈식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권력의 식민성'을 해체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과거 식민의 피해자였던 것은 맞지만 현재의 위상을 고려해봤을 때 키하노가 언급한 '권력의 식민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2018년 sk건설이 참여한 캄보디아·라오스 댐 건설 중 붕괴 사고 등이 있는데, 현지 주민 강제 이주,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한국에 신식민주의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더불어 한국이 신식민주의적 행위자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아직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번 토론문에 나온 용어와 비슷하지만 '다중심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국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던 입장으로, 경제 교류와 ODA를 통해 식민과 전쟁의 피해자였던 몇몇 국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교류는 개발도상국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피해자였던 입장으로 강압적인 것이 아닌 상호수혜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문화 역시 일부 국가에서 '헤게모니'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동아시아에서의 K-뷰티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택적·합리적 수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무언가의 식민관계 혹은 우월감이 되기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염두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현 선생님 토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위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아성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위적 관계 지속에 익숙해져 식민 사상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우월감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상호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탈식민화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권력의 식민성 해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장 - 흑인 지리학

박제욱 선생님의 발제문에서 언급한 지리학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지리학은 권력, 지배, 식민적 세계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식이고, 결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이라는 지식의 주 소비 계층을 제외한 “배제”가 자연스럽게 행해졌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된 동아시아의 “주변화”, 백인 남성 중심적 지식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페미니스트 지리학 등의 이슈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되고 지리학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한국에 관해 주로 다루지만 장차 배제되어 있던 이슈들 역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1. 근대지리학의 발전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우리나라의 지리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양 중심(제국주의 등)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근대지리학 발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지리적 요소들은 일부 배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한국의 근대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의 중요한 지리적 요소는 장시의 발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의 발달(정기 시장)은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19세기에 들어 전국적으로 약 1,000개 이상의 장시가 형성되었습니다¹. 장시는 마을과 마을, 항구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정보, 인적 자원, 문화의 교류를 담당하는 중요한 결절지였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로망 발전과도 연관됐고 조선의 중요한 지리적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시와 도로망 모두 근대 조선에서 중요한 요소였지만 근대 지리학 발전에서는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 시기 식민관의 일종으로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근대 조선 경제의 중심이었던 장시를 재편하려 했고(후진적이라 평가하며 침략을 위한 재편) 수탈을 위한 도로망 정비 및 철도 건설이 진행되었습니다². 이는 조선의 지리적 요소가 침략과 수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¹) 김대길,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vol.35, no.4, 통권 129호, 87-113p.

²) 장용경·허영란, 「일제의 식민지 '調査事業'과 朝鮮總督府 中樞院 조사자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3~24p.

2. 현대 한국에서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개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도(道)를 폐지하고 다각적인 광역시를 많이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23부제와 상당히 유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필요성 등을 듣고 싶습니다.

23부제와 어느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13도제로의 전환이 빨랐다고는 하지만 도 단위를 폐지하고 다각적인 광역시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8도를 해체하고 세분화된 23부로 재편하자는 23부제의 의도와 어느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개편 역시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설치됨으로써 현재 도 단위의 행정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독자적인 행정 및 재정 능력을 갖춰 분권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권 문제와 더불어 행정 조직 신설로 인한 막대한 비용 발생, 지역 정체성 혼란 등의 사회적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개편이 아닌 순차적 개편을 통한 점진적 발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